

#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최상목도 탄핵”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 정지 “내란사태, 타협·협의 대상 아니다” 최, ‘계엄 적극 반대’ 임명 기대감도  
지도부, 국무위원 일괄탄핵엔 신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국 혼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이재명 대표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전면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당 관계자는 지난 28일 “비상계엄에 따른 위법한 12·3 내란 사태는 타협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내란 진압을 가로막는다면 누구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야당은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중 탄핵 심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탄핵안

발의를 한 차례 미루기도 했다. 하지만 대행은 여야 합의를 내세워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권에선 최 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하지만 최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보수 재정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만일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버리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행인은 “만약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시기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체없이 (탄핵)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일단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강조하며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겠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인 장관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국무위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경태 의원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명 이상일 때 구성되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으로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이어 한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여기에 장관 5명이 추가로 탄핵당하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지도부는 아직 일괄탄핵 시나리오엔 신중한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개별 의원 입장일 뿐 당내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 광주시, 올해 정책 평가 63건 수상 ‘역대 최대’

전년비 28.6%·3년 평균비 61% 증가  
경제·일자리·돌봄·혁신 ‘최고 성적’

반환점을 돈 민선8기 광주시가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시정 전반에 대한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합동평가,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총 63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 건수는 2021년 40건, 2022년 28건, 2023년 49건 등으로 전년보다 28.6% 늘었고, 지난 3년 간 평균 39건과 비교하면 61%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상 성과를 기록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이제는 된다”는 확신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한 결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책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박람회’,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소풍’과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ON)’ 등 다양한 소통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공시제 부문 대상과 일자리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1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장주의 선별적 돌봄을 보편적 통합돌봄 체계로 혁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 유공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정부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광주시는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청년드림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지역청년 지원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 AI집적단지 조성·AI영재고 설립 ‘탄력’

‘AI기본법’ 통과…지원근거 마련  
AI 2단계·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영재고 건축비용 재정분담 합의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AX 실증밸리 확산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률에는 AI 집적단지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겨있어 광주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비·지방비의 재정분담 이견을 보였던 광주 AI영재고도 최근 협의가 마무리돼 AI영재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한 대안으로 상정

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추진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426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또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 시설도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9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도 본격화된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광주AI영재고 건립 사업비

의 재정분담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광주AI영재고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871억원의 70%(611억원)를 정부가, 나머지 30%(260억원)를 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난 8월 광주AI영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5년 2월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 공모에 착수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오룡동 468일원)에 연면적 1만 5990㎡, 지하 1층~지상 5층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동 규모다.

최권범 기자

##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지원 확대

용자지원 80억·대출금리 1% 적용

전남도는 국내 정세 불안과 관광 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남도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액을 기존 6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으로 확대하며, 대출금리도 자체 최저금리인 1%를 적용한다.

관광사업체가 직원 급여나 홍보비, 임차료 등으로 활용할 운영자금 대상 업종도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식당업 등 기존 6개 업종에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을 추가해 8개 업종으로 늘린다. 업종별 용자한도액도 각 1억원씩 증액한

다. 여행업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야영장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청년기업 지원을 강화해 용자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동종 업종의 용자지원액보다 최대 20% 증액해 지원한다.

운영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에 이어 계속 시행한다.

2025년 상반기 전남도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신청은 30일부터 2025년 1월20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자는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금융기관 대출상

담확인서 등을 첨부해 사업장 소재 시군 관광부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당일까지 우편으로 신청서류가 도착하도록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웹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등록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가 신청서류 심사와 사업장 현지 조사를 거쳐 2월께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에서 용자를 실행하면 된다.

주순선 전남도관광체육국장은 “관광산업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기금 운영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수요를 감안해 용자지원 총액을 160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